현장과 시각

박상천 의원이 놓친 것

임동욱
서울 취재팀장

민주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전남 출신으로 구 민주당을 대표했던 5선의 박상천 의원은 열린우리당 출신의 4선의 문희상 의원에게 밀리면서 '수모'를 당했다. 당장 민주계에서는 '돌고 돌아 우리당'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계가 통합의 정신을 버리고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독차지한 데 이어 국회 부의장까지 장악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 민주계는 정세균 대표 등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계가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출신의 정세균 후보를 지지, 1차 투표에서 당선되도록 했는데 이번 국회 부의장 경선 과정에서 '토사구팽' 당했다는 것이다. 부의장 경선 직후 만난 민주계 핵심 의원은 "정 대표 측이 도왔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반문하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당내 여론은 민주계와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번 국회부의장 경선은 계파 간의 나눠먹기보다는 자유 투표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계가 당내 의석수에서는 10석도 못 미치지만 박 의원이 33표를 얻은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통합 과정과 총선 공천 과정,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박상천 의원이 당내 의원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그동안 정치적 대의보다는 민주계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각인되면서 의원들의 표심이 돌아섰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출신 모 의원은 "박상천 의원은 공당 대표를 3번이나 지낸 정치 원로인데다 5선으로 문 의원보다 선수도 앞서고 당내 화합이라는 명분도 가지고 있어 정상적이라면 합의추대로 국회 부의장이 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지난 통합 및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 의원의 독선적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당내 의원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결정적 패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최고 원로가 당내 경선에서 수모를 당한데 대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다.

만약 박 의원이 국회 부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당내 화합과 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한 뒤, 5선 의원의 관록으로 초재선 의원들을 이끌었으면 어땠을까. 민주당을 넘어 민주·개혁 진영의 큰 나무로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반기엔 국회 부의장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경선 결과는 박 의원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tuim@kwangju.co.kr

"북 비협조땐 개성관광도 중단"

정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진상조사·재발방지 거듭 요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와 관련한 북의 협조 여하에 따라 개성관광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 차원에서 남측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 조사단 수용을 북이 계속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의 하나로 개성관광 중단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故) 박왕자씨 피살사건 당일인 지난 11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개성관광은 일단 유지키로 했었다.

정부는 진상 조사단 수용을 요구하는 남측 전통문 수신을 연이어 거부한 북한에 대해 적절한 촉구 수단을 모색하고 방북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개성관광 중단 문제를 보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서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대책반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단 금강산 관광만 중단하고 개성관광은 계속한다고 한 입장은 유효하다"면서도 "지역은 다르지만 (안전관련) 제도적인 문제는 개성 역시 미비돼 있어 개성에서도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성관광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할 문제"라며 "북한의 향후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북이 진상조사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소개한 뒤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북측이 사과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며 "전반적인 추가 대책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관광객 안전이 보장된다면 개성관광은 중단하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첫 소집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등 대책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취임후 처음으로 소집,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내일 아침 이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 두가지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NSC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 등 외교안보 관련 현안이 총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두 사건을 계기로 남북 및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협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북한과 일본에서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점검하고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6일 국무회의에서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연합뉴스

박왕자씨 언제 호텔 나섰나

정부 합동조사단 금강산 2곳 CC TV 분석 착수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의 피살사건의 실체규명에 활용될 관광지구 내 호텔 2곳의 폐쇄회로(CC) TV가 17일 현지에서 봉인돼 오후에 정부측에 넘겨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날 "호텔 2곳의 CCTV가 원래 상태 그대로 봉인돼 현지 직원에 의해 이송되고 있으며 오후에 남측 영내로 들어와 곧바로 정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CCTV 2개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비치호텔과 해금강호텔에 각각 설치돼 있던 장비들이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CCTV에 기록된 사건 당일 영상을 복원해 피살된 박씨와 이번 사건 증인들의 호텔 출발시각 등 사건 관련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가 사건 당일 비치호텔을 출발한 시각은 윤 사장이 최근 방북해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지난 11일 오전 4시18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박씨가 피격된 시점이 북측 주장과 달리 오전 5시20분 전후라고 주장하는 증인 이모(여)씨가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사건 당일 산책을 떠난 시각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해금강호텔을 나선 시점이 오전 5시 정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CCTV 분석 결과 이 주장이 맞다면 이씨 목격담의 신빙성이 확인된다. 이는 곧 이씨가 호텔을 나서기도 전에 박씨에게 총을 쐈다는 북측 주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기도 한다.

/연합뉴스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신임 인사차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해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예방한 정정길 대통령 실장에 주문

"돌이킬 수 없이 악화 안되게 남북관계 치밀한 대응 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7일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교동 사저를 예방한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과 만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물밑접촉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와 관련,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저의를 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자세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과 맹 수석은 이날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말문을 열었다.

정 실장이 "김광웅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행정대학원장을 할 때 제가 국가정책과제 주임교수를 맡아 김 전 대통령의 특강을 모신 적이 있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은 "옷소매만 스쳐도 전생에 인연이 있다는데 저와 인연이 있으시다"고 화답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 실장이 "건강해 보이신다"고 하자 "신장이 나빠 일주일에 세번씩 투석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옛날에 다리를 다친 곳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도 안녕하시냐. (대통령이) 요즘 여러가지로 심려가 많으시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盧 前대통령 고발 원치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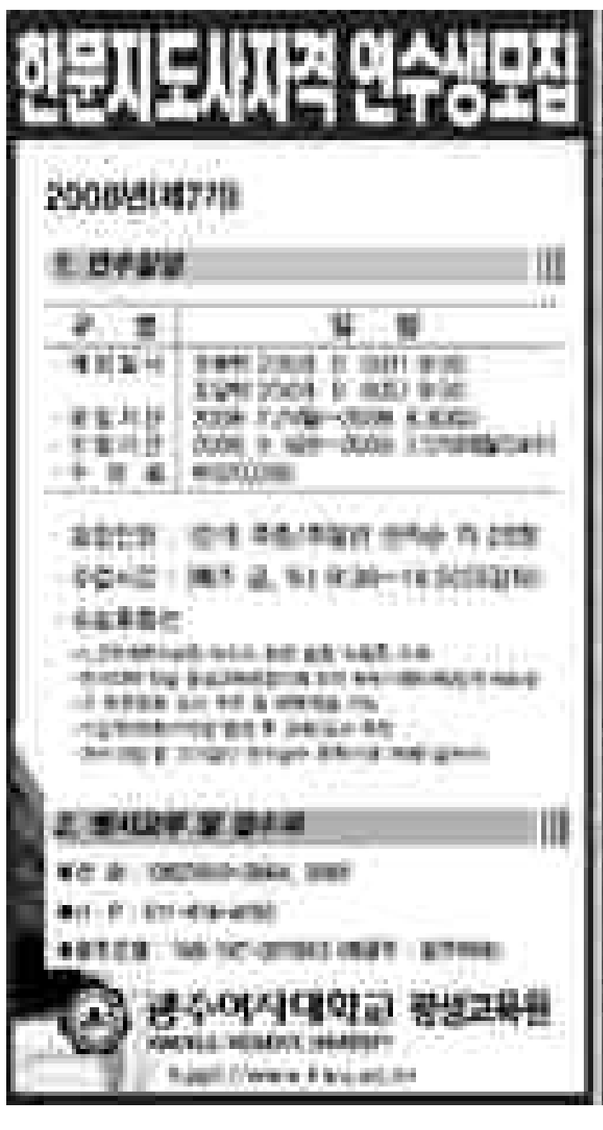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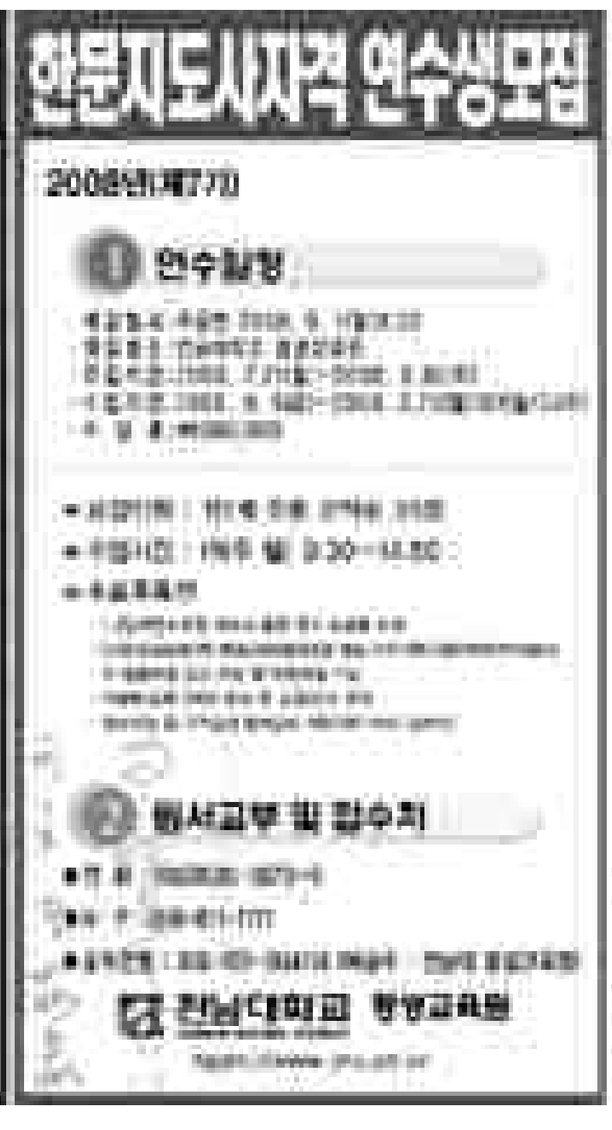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이르면 오늘중 기록물 회수"

국가기록원은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갖고 내려 갔던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르면 18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회수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7일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하시라도 반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이르면 내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기록물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록물 회수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는 검찰고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검찰고발 상황을 원치 않아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무단반출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